

## “이재명의 통합정부는 정치적 연대와 다당제를 통한 새로운 정치체제”

5일(토) 11시 ‘통합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정부 토론회 개최

- 박상철 경기대 교수, 5일(토) 11시 ‘통합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경북 통합정부 토론회 개최
- 「국무총리권한기본법」 제정으로 개헌 없이 책임총리제 가능, 책임 장관제 도입 제안
- 중앙인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국민통합과 정부혁신 실현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TV토론 등을 통해 ‘통합정부 구성 의지’와 ‘정치교체’를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정부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제시돼 주목된다.

민주당 선대위 정치혁신특보단장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5일 11시 대구광역시에서 열리는 ‘통합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전환 정치혁신포럼’ 발표문을 통해 “통합정부는 지역, 세대, 계층,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국민 대통합의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전제하고 “정치적 연대를 위해 소수정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당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상철 교수는 “통합정부의 핵심 가치는 연대와 책임 그리고 탕평으로, 연대는 정책적,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치세력들이 협상과 협약을 통해 의원내각제의 중연정 이상 연대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책임에 대해서는 “비대한 행정부처를 전문분야별로 재분해해서 DJ·참여정부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책임총리제, 장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계획이다. 특히, 개헌 없이도 실질적인 책임총리제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권한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며, 장관책임제를 위해 장관에게 예산(기재부)·조직 및 직제(행안부)·인사(인사혁신처)권한 부여를 제도화해 이른바 ‘관료에 의한 포획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